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정책에 청년을 더한다!

- 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법무부·성평등가족부 2030청년자문단, ‘청년의 날’
맞이 합동 정책 교류 세미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의 2030청년자문단(이하 청년자문단)과 함께 9월 14일에 ‘청년의 날’ 기념 정책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 청년의 날: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기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 이번 세미나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최근 청년세대가 병역,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삶의 여러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청년자문단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청년세대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권익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4개 주관 부처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청년보좌역들이 직접 나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발표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 공유'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과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청년자문단과 공유했다.

* 최근 1년(`25. 7월~`26. 6월) 동안 19~34세 청년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연령대별 정책수요인 병역, 취업, 자산형성, 주거, 출산·육아 등 5개 분야로 분석

□ 특히, 주관 부처의 청년자문단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열띤 토의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청년보좌역 5명이 토의 진행자로 참여해 다부처 간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주관 부처는 조별 토의를 통해 산출된 정책제안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부처의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개선의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청년보좌역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은 특정 부처의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부처 장벽을 허물고 청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주경희	044-200-7161
	민간협력담당관	담당자	주 무 관	박선경	044-200-716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실	담당자	청년보좌역	우지우	044-200-7167
담당 부서	법무부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심경보	02-2110-3111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사 무 관	손장혁	02-2110-3110
	법무부 장관실	담당자	청년보좌역	남창형	02-2110-3304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044-202-3701
		담당자	사 무 관	김나진	044-202-3706
		담당자	청년보좌역	조현수	044-202-3705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곤	02-2100-0401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 무 관	박우열	02-2100-6082
	성평등가족부 장관실	담당자	청년보좌역	원은설	02-2100-6009